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 도 자 료

http://www.mke.go.kr

G20 SEOUL SUMMIT 2010

'10년 11월 5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정낙훈 문화서비스표준과장, 최미애 공업연구관(509-7279)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KS로 개선한다.

-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KS 제정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 경)은 11월 5일 고령사회와 핵가족화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에 관한 KS 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2008년 1300개였던 노인요양시설의 수가 2010년 현재 3,611개로 급증했으나, 일부 시설이 **서비스 질을 외면한 채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 노인요양시설 현황('10.10월 기준) : 시설수(3,611개), 입소 노인수(90,812명)

○ 제도 시행 후, 뇌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노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입소가 가능해진데다, 사회복지시설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어 시설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아 입소 노인이나 가족 모두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끝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불거져 온 **부실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S 표준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제반 요건**, 경영이념, 시설관리, 인적자원의 관리 및 교육, 환경·안전·위생관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건강관리·개인위생·기능훈련 등 일상 서비스뿐만 아니라, **상담, 여가, 임종케어, 인권보호 관련사항 등의 서비스 수행절차**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 제2010-504호('10.11.5) 참조
* 해당 표준 KS S 2028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은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www.standard.go.kr)에서 열람가능

□ KS 표준 제정은 국가가 보다 안전하고 보증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차원의 관리감독 보다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스스로 서비스 품질관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차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기술표준원은 금번 제정된 표준이 노인요양시설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노인복지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며, 아울러 **노인요양시설의 실질적인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 KS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KS 제정을 시작으로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간병인·고령친화제품 대여 등 복지차원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활기찬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인건강·교육·여가문화에 관련한 서비스에도 표준화**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 참고자료 : 1. 노인요양시설 현황
2.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서비스 표준화계획

참고자료 1

노인요양시설 현황

□ 현황

○ 2010년 10월 11일 기준으로 전국에 3,611개의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이 있으며, 정원 114,333명에 현재 90,812명이 입소하고 있음

* KS S 2028(노인요양시설 서비스)의 적용범위에 공동생활가정은 포함되지 않음

《전국 노인요양시설 현황 (공동생활가정 포함)》

지역별	시설수	정원	현원
서울특별시	399	10,703	9,224
부산광역시	154	5,254	3,997
대구광역시	119	3,972	3,218
인천광역시	196	6,834	5,340
광주광역시	86	3,092	2,395
대전광역시	85	2,771	2,219
울산광역시	39	1,523	1,193
경기도	1,048	30,974	24,844
강원도	179	6,237	4,916
충청북도	206	5,317	4,216
충청남도	199	6,318	4,572
전라북도	191	6,735	5,292
전라남도	233	6,208	5,040
경상북도	235	8,267	6,317
경상남도	195	7,779	5,954
제주특별자치도	47	2,349	2,075
계	3,611	114,333	90,812

* 자료원 :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문제점

○ 노인요양시설은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해오다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체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신체적, 인지적 문제를 지닌 입소 노인에 대해 **의식주를 해결하는 최소한의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어 질 낮은 서비스가 사회문제로 대두**

노인요양시설의 문제 사례

- 입소자격이 안되는 노인들의 서류를 의사와 짜고 위조하는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금 청구
  * 2009년 28개소, 2010년 87개소로 부당청구금액은 23억원에 달함
- 부실한 식사, 간호 등 관리소홀로 병을 유발
- 입소 노인이나 보호자가 원하는 데도 퇴소를 시켜주지 않는 경우

□ 표준화의 파급 효과

○ 노인요양시설의 경쟁력을 높여, 향후 **서비스 시장개방에 선제적 대응**

-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해외환자유치사업과 연계 운영할 경우,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에 서너지 효과**

○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차별화된 인증제도에 대한 수요 충족**

- 일부 시설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 해외인증업체의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 해외인증취득을 국내인증으로 유도

참고자료 2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서비스 표준화계획

□ 목적 및 필요성

○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관련서비스의 표준화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차원의 정책이 추진 중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이 표준화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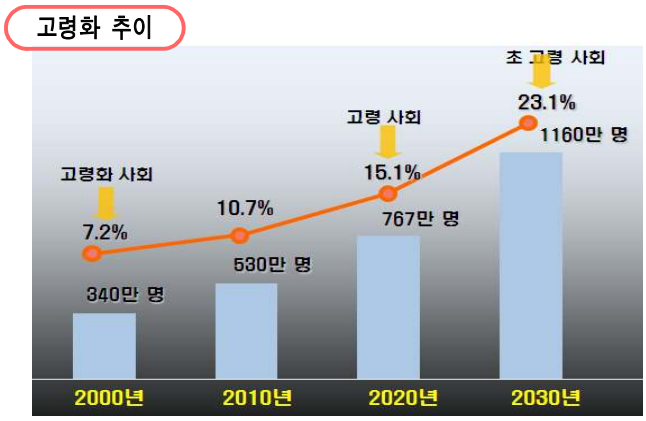
- 고령인구증가로 인한 고령친화 서비스 수요의 확대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고객만족도 제고는 **노년 삶의 질**과 직결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법제화되면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표준의 필요성 대두

  * 2009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19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0.7%이며, 2010년에는 536만 명으로 늘어 11%에 달할 것으로 예상

《저출산고령사회 추이》





□ 향후 계획

○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다함께 편안한 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개선, 소비자 보호 및 관련산업의 인프라 지원을 위해 KS 표준을 확충

-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실질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보육시설 서비스에 대해 표준화 및 인증 실시

-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인요양시설·간병인·고령친화 제품 대여 등 복지차원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활기찬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인건강·교육·여가문화에 관련한 서비스에도 표준화를 도입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서비스 예시》

	분 류	세부 서비스 업종
저출산	1. 보육	보육시설, 베이비호텔, 베이비시터중개
	2. 교육	유아교육시설, 방문교육
	3. 가사지원 등	산후조리원, 가사도우미중개
고령	1. 재가	간병인, 가사, 급식, 목욕
	2. 시설	노인복지관, 요양시설, 전문요양, 노인전문병원
	3. 금융	개호보험, 개인연금, 자산관리
	4. 일반생활	상담, 교육, 여행, 교양, 운동, 고령친화 휴양단지

○ 해외진출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향후 유망할 것으로 판단되는 **서비스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표준화

- 지경부 「10대 해외진출 유망서비스」로 선정 또는 글로벌 사업성이 높은 서비스에 대해 국제표준화 및 아시아권 국가간 표준협력 강화

* 산후조리원은 해외에서는 낯선 개념이지만 아시아국가 중심으로 확산일로